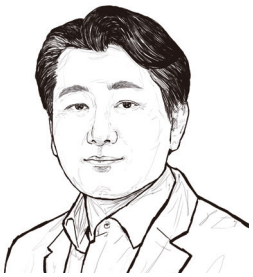
노동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속하고도 적극적 행정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노동자성 유무와 상관없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뻗어 있는 전달 체계를 활용한다면 현행 법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건강권 위협받는 우리 사회 노동자들

최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형식상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 근로계약 관계에 기반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일부 직종에 대해 법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직업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한 법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법에서 정한 직종 외의 노동자들은 그 부분적인 보호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한편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2022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해 산재보험에서 승인받은 노동자들은 1,34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9.3%(665명)에 이르렀다.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9%(106명)였다. 이는 위험·유해 업무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외주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806명(2022년 기준)에 불과해 적절한 예방 감독 및 지도,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책지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아닌, 사업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존한 정책들로 그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정책의 방향성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은 비단 산업보건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산업안전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업무상 사고로 사망해 산재보험에서 승인받은 874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80.9%(70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제화되고, 조례 제정, 고용노동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 우선, 특수고용 노동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산재 취약 노동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성 유무와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신속한 전달 체계를 활용해 고용노동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러 행정 영역에서의 권한과 연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건축·식품·조세 등의 영역에서 지방자체단체가 보유한 권한을 노동자 건강 보호와 연계할 경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의 유기성을 고려해야 한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중복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하며, 정책 집행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의 정책 연계를 통해 부족한 전문성, 법적 권한 등을 보완하고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